

# 노영민 “인구 비례 따지면 충북도 1석 줄여야”

(민주당 의원)

■ ‘충청권 국회의원 의석수 확대’ 반박 잇따라

“인구 대비 의석수 강원 최다… 호남 부각시켜 당대 당 싸움 몰아가”

강운태 시장 “의원정수는 행정구역·면적 등 다양한 조건 감안해야”

충청권의 국회의원 의석수 확대 주장을 놓고 의원 간 설전이 벌어지는 등 논란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 노영민 의원은 25일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의 ‘국회의원 의석수’ 관련 발언에 대해 “경쟁력, 피상적, 비합리적인 발언”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노 의원은 이날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방식은 여야간 합의에 의해서 통과된 선거법에 따른 것”이라며 “정 의원은 마치 한 정당(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처럼 정략적으로 몰아갔다”고 비판했다.

노 의원은 “인구 대비 국회의원 의석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호남이 아닌 강원”이라며 “그런데도 호남을 부각시켜 당대 당 싸움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노 의원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은 주민 대표성과 지역 대표성이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며 “표의 등가성만으로 획정하는 것처럼 접근, 헌법 소원을 내는 등 문제의 본질에서 벗어난 논리를 폄하하고 있다”고 정 의원을 몰아세웠다.

정 의원은 논리대로라면 오히려 충북의 의석수가 줄어들게 된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그는 “표의 등가성만 기준으로 하면 충북지역 국회의원 수는 오히려 한석이 줄어든다”고 지적했다.

단순 인구 비례로만 따진다면 수도권은 10석이 증가해야 하는 반면 인구 하한 기준(13만525명)에 못 미치는 보은·옥천·영동은 통합대상 선거구가 폐·충북은 오히려 1석이 줄게 된다는 것이다.

노 의원은 “비수도권 공조를 통해 수도권을 견제해야 하는데, 정 의원은 지역감정을 조장하고 대결 구도로 물고 있다”며 “정 의원의 주장은 새누리당 당원조차 동조하지 않는, 종

청권에 실리도 없고 명분도 없는 결과를 자초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우택 의원은 “현법소원을 제기한 것은 인구만을 기준으로 의석수를 조정하자는 뜻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인구 비례로만 따진다면 수도권의석은 늘고, 충북지역 의석은 줄게 된다는 노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수도권에서 의석수를 늘려야겠다고 주장하지 않는데 갑자기 (수도권을) 끌어들이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비켜쳤다.

정 의원은 지난 14일 충청 인구가 호남보다 많은데도 국회의원은 충청(25명)이 호남(30명)보다 5명이나 적은 것은 부당하며 민주당 책임론을 제기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강운태 광주시장도 이날 오전 열린 시청 간부회의에서 ‘충청권 의석수 확대 주장’과 관련해 “이해는 한다.

하지만 호남을 불고 늘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없다”며 불편한 마음을 드러냈다.

강 시장은 “호남보다 인구가 조금 많아진 것 가지고 의원 정수를 늘려달라고 하는데, 인구로만 따진다면 의원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으로 가야 한다”면서 “의원 정수는 관련법을 통해 인구를 비롯한 행정구역, 지세, 교통 등 다양한 조건을 감안해 확정하도록 돼 있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또 “호남의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좋은 일은 아니다. 호남권 자체단체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면서 “외지인이 호남으로 이주하면 취득세·재산세 감면, 보조금 등을 지급하고, 출산 장려책을 통해 출산율을 높이는 등 인구증가 정책 개발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진표기자 lucky@·연합뉴스

## 늘리는 국유재산 11만m<sup>2</sup>… 관리 허술

### 이낙연 의원 지적



재산이다.

특히 정부는 공실 기간에 대한 통계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자산을 매각하거나 임대했을 경우 상당한 수익을 낼 수 있음에도 공실 기간에 대한 기회비용을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지역별로 보면 인천의 국유재산 공실 면적이 3만818m<sup>2</sup>로 가장 넓다. 경남(2만4천550m<sup>2</sup>)과 경기(1만567m<sup>2</sup>), 충북(1만800m<sup>2</sup>) 등 지역도 국유재산 공실 면적이 높은 지역으로 꼽힌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장외마권 발매소 건축위 심의 받아야”

### 황주홍 의원 건축법 발의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해당 건축물이 주거·교육환경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어 장외발매소가 우후죽순으로 들어서는 것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

황 의원은 “장외마권발매소는 위탁시설인 카지노업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현행법에서는 예식장, 회의장과 같이 분류돼 있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나주 혁신도시·강변도시 남다른 부동산 투자법!

**매물을 팔려는데!?**  
**매물을 사려는데!?**

고객 여러분의 고민을  
솔로몬 부동산이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상업용지 / 균생용지 / 점포주택지 / 주차장용지

바로 지금이 기회!!

나주 혁신도시 전문

나주 솔로몬 공인중개사

H. 010-5587-3080 / 010-3505-8005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리 354-32(우정사업본부 후문 방향)

## 부동산 성공 투자 하늘땅 공인중개사 가 함께합니다

### 상가/건물

- \* 첨단 월계동 LCT위 2층 상가 960m<sup>2</sup> 매 18억(분할 매매 및 임대 가능)(대형병원, 학원, 프랜차이즈 적합)
- \* 교원공체부근 1층상가 225m<sup>2</sup> 매 12억3천(보1억3천, 월600만 포함)유명프랜차이즈 입점 중
- \* 서구 아파트상가 1,800m<sup>2</sup>(점포 7칸) 매10억 (보1억1천, 월610만, 월5억9천 포함)
- \* 사우나건물(8층) 1억5천(보8천, 월800만 대출 9억 5천), 직영 월천만수입
- \* 도천동 신축창고 대지2,500m<sup>2</sup>,건평500m<sup>2</sup> 17억
- \* 벽진동 창고,고물상용지 2,900m<sup>2</sup> 임대 보2천/월200

### 대지/전답

- \* 상무지구 대지 405m<sup>2</sup>(122평) 매 8억5천
- \* 용전동 전(자연녹지) 1,180m<sup>2</sup> 매5억3천
- \* 완도 약산 전(계획관리) 11,000m<sup>2</sup> 매 8억4천
- \* 장흥 용산면 전,임야 101,851m<sup>2</sup> 매 6억
- \* 남평 우산리 전(계획관리) 17,000m<sup>2</sup> 매 5억2천

### 기타

- \* 영암 삼호중공업인근 주유소 매 9억(대출 5억)
- \* 곡성 목사동 식당 1,750m<sup>2</sup> 매 3억9천(금마, 조정가)
- \* 담양 월산면 가든식당 1,520m<sup>2</sup> 매 3억8천

### 광주,전남권 매도·매수 상담, 접수 환영

부동산 투자의 새로운 패러다임  
하늘땅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5536-0382 Fax 062) 974-0449

## 금당공인중개사

매매·교환·설계·시공등의 물건을 구합니다.

### 투자·감정가 이하

- \* 충장로5가 버스도로 대지777m<sup>2</sup>(235) 공시지가 17억7천만 오피스텔, 상가개발적합 10억2천
- \* 험평군 영업 절차는 여관 대지 320평 건평211평 객실 21실 대출4억 교환도 가능 8억8천
- \* 대인동 소방도로 상업지역 786m<sup>2</sup>(238) 오피스텔·생활주택·디세대적합 금남로 5가에 있음 9억2천
- \* 공장부지 나주시 남평을 비행장으로 부근 2192m<sup>2</sup>(663)와 주택 매도 294천
- \* 광산구 신창동 6차선과 4차선 도로 코너 대지302평 건물은 4층 715평 사무, 병원, 오영시설, 종교시설 적합 등 18억2천 전세3억에 월 1600선 수익 증축도 가능 33억
- \* 조선대학교 앞 대로면 동명동 5층건물 대지318m<sup>2</sup>(96) 건평736m<sup>2</sup>(228) 상가와 주택 있고 월150선수의 은행2억5천 매도 8억
- \* 순천시 거곡동 상업지 나대지 587m<sup>2</sup>(177) 생활주택 허가지역 대출 3억2천 매도 3억6천
- \* 북구 두암동 싸우나 건물 대지 101평 건평300평 목욕탕은 적합하고 상가는 보증금 4500만원 월150선수의 은행2억5천 매도 8억
- \* 금남로 3가 부근 상당 대지 62평 건평 128평 5억5천
- \* 매도 수기동 상업지역 705m<sup>2</sup>(213) 월세·투룸·쓰리룸 92개 허가, 주택기금 12억기준, 투자에 적합 7억2천
- \* 임대. 신창동 보건대학 부근 주택전시관 1층167m<sup>2</sup>(50) 전세 5천에 월200만 임대. 분위기 있는 식당도 적합
- \* 임대·매매. 생활동에 신축중인 기도생활주택 2차 건물 호텔급 시설의 풀옵션 9평형 주택, 입주는 12월 초. 임대는 전세1000에 월40선. 매매는 6300만원(대출 3천만원 포함) 투자자는 여러 개를 매입해서 임대하면 수익성이 매우 좋음.

### 매도·임대

- \* 매도. 수기동 상업지역 705m<sup>2</sup>(213) 월세·투룸·쓰리룸 92개 허가, 주택기금 12억기준, 투자에 적합 7억2천
- \* 임대. 신창동 보건대학 부근 주택전시관 1층167m<sup>2</sup>(50) 전세 5천에 월200만 임대. 분위기 있는 식당도 적합
- \* 임대·매매. 생활동에 신축중인 기도생활주택 2차 건물 호텔급 시설의 풀옵션 9평형 주택, 입주는 12월 초. 임대는 전세1000에 월40선. 매매는 6300만원(대출 3천만원 포함) 투자자는 여러 개를 매입해서 임대하면 수익성이 매우 좋음.

문의 222-4994, 010-2632-5659  
생촌동 (구) 등기소 자리, 가도 생활주택 전시관

## 시교육청 9급 인건비조차 편성 안해 혁신학교 확대보다 평가 제대로 해야

광주시의회, 예산안 심의

12일 광주시의회의 내년도 광주시교육청 예산안 심의에서는 9급 행정직 인건비 미편성과 혁신학교, 초등돌봄교실 확대 등 부적절한 예산 편성이 저지됐다.

◇인건비조차 편성 안해=정희곤(교육의원, 북구) 광주시의원은 이날 광주시교육청 본예산 심의에서 “9급 행정직 직원의 인건비 편성이 저지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지난 14일 충청 인구가 호남보다 많은데도 국회의원은 충청(25명)이 호남(30명)보다 5명이나 적은 것은 부당하며 민주당 책임론을 제기했다.

정 의원은 또 “학교 노후정보화기기 교체, 무상교과서 및 지도서 구매 관련 예산이 공립과 사립, 동부교육청과 서부교육청이 다른데 이유가 뭐나?”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광주시교육청의 예산 편성은 행정전반에 대한 이해 부족, 과다편성에 따른 불용, 과소 편성에 의한 비효율적 사업 집행 등이 우려되는 만큼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혁신학교 확대보다 평가부터 =이은방(민주·북구) 광주시의원은 이날 “광주시교육청이 예산 편성이 저지된다”고 지적했다.

올해 광주지역 초등돌봄교실 신청 학생 수는 4573명에 달했지만 시설 부족으로 3274명밖에 수용하지 못해 미수용률이 28%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시교육청은 내년에 7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초등돌봄교실 140실과 돌봄강사를 추가로 확대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 의원은 “돌봄교실로 전환이 가능한 각급학교 유치원교실에 대한 실태와 학생수도 조사조차 없이 예산만 무리하게 세우고, 돌봄강사 채용도 지난해와 임금체계가 달라 직종내 차별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박진표기자 jwpark@kwangju.co.kr

## “잘못된 항만 정책과 예산 훌대를 즉각 중지하라”

### 김재무 의장 광양항 활성화 촉구 기자회견

2013. 11. 25. (월) 전라남도의회



김재무 전남도의회(장)이 25일 전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양항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부산항 집중 개발정책이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남도의회 제공)

## “광양항 예산 급감·체선율 전국 최고”

### 김재무 전남도의회(장), 정부 획기적 지원책 내놔야

전남도의회 김재무 의장은 25일 “정부의 잘못된 항만정책으로 광양항 예산 지원이 제대로 된 것”이라며 “광양항 활성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획기적인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 “이로 인한 손실비용만도 부산항의 7배인 428억원이며, 이러다간 광양항이 군소항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또 “여수광양항만공사

는 출범 당시 빠른 1조억원이 넘는 부채를 상환하는데 예산의 대부분

분을 쏟아붓고 있어 시설투자는 엄두도 못 내고 있는 실정이다”면서 “현 정부가 국민대통합과 지역균형 발전에 힘써 나가겠다고 수차 공언한 만큼, 광양항의 활성화를 통해 이를 보여 줘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소규모 영세상인 상권 보호해 달라”

### ‘KTX 호남선 개통’ 경청투어